

“광주 군공항 이전·전력 배치 차질 없이 준비를”

국회국방위 국감…공군 제1전투비행단 현장점검

“단순한 부대 이전 넘어 지역사회 상생까지 고려”

국회 국방위원회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전력 임시 배치 과정에서의 차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진성준 위원장은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군공항 이전과 전력의 임시 배치가 작전 수행과 조종사 양성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광주 군공항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군 공항 이전과 제1전투비행단 전력의 임시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단순한 부대 이전을 넘어 군사 대비 태세와 작전 운영, 조종사 양성, 지역사회와의 상생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방위원회도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진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

다”며 “이번 현장 점검이 제1전투비행단의 임무 수행 여건과 향후 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현장 시찰 일정으로 비행단을 찾아 활주로 등 보안 시설과 전경·주요 장비 등을 둘러봤다.

진 위원장의 모두 발언 외 모든 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오후에는 장성군 상무대로 이동해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현장점검에 맞춰 공군 제1전투비행단 앞에서 마북동 주민들의 탄약고 이전 촉구 집회도 벌어졌다.

주민들은 “광주 군공항을 옮기면서 탄약고를 마북동에 그대로 두는 것은 ‘좋은 가져가지만 총알은 놔두고 가는 격’이라며 동시에 이전을 촉구했다. 아울러 재산권 행사를 위한 마북동 탄약고 인근의 군사보호구역 지정 해제도 요구했다.

이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시찰에서 진성준 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전남광주 반도체특위, 전력·용수 등 3개 분과 가동

분과별 의원 5명 배치…군공항 이전·기업유치·인재양성 대응 자원 공급·이전 지역 상생안 구체화…입법·예산 지원 추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호남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확보와 부지 마련, 인재양성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분야별 대응에 나선다.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자원 공급 지역 및 이전 지역의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필요한 입법·예산 지원을 추진한다.

시의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상

설특별위원회는 15일 전남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핵심 현안을 다룬 3개 분과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분과는 전력·용수 및 상생발전, 부지 확보·군공항 이전 및 기업유치, 정주여건 및 인재양성으로 나뉜다. 각 분과에는 의원 5명씩 참여해 현안을 검토하고 지역 차원에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한다.

반도체특위는 우선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부지 등 기반시설을 제때 갖추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클러스터에 자원을 공급하는 지역과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구체화한다.

기업 입주와 인력 확보를 위한 과제도 논의한다. 기업유치 방안과 인재양성 대책을 살펴보고, 주거와 생활 기반을 갖춘 자족형 첨단 배후도시 조성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분과별 논의에는 전문가 초청 세미나와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도출한 과제는 중앙정부 건의, 국회 입

법·제도 개선, 조례 제·개정,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나눠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김성일 반도체특위 위원장은 “모든 의원이 각자 맡은 분과의 전문가가 되어 현장과 서류를 살피고 파고들고, 실질적인 인허가 단축과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도체특위는 발굴한 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ws1@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정책총괄수석에 윤영상 한국과기원 연구조교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보좌할 정책총괄수석 임용시 협에 윤영상(62·사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조교수가 최종 합격했다.

15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시 제1인사위원회는 지난 12일 윤 연구조교수를 정책총괄수석 최종합격자로 공고했다. 정책총괄수석은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가급 직위로, 정식 임용은 다음 주께 이뤄질 예정이다.

정책총괄수석은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 결정을 보좌하고 국정·시정 과제와 공약 추진을 지원한다. 정부·국회·시의회를 비롯해 정당·사회단체와의 소통·협력, 시민 여론 수렴도 맡는다.

완도 출신인 윤 연구조교수는 광주 대동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에서 정치통일을 전공하며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



며, 북한학·통일학과 평화학을 연구해 왔다. 서울대 대학 중이던 1985년 미국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투옥돼 제적됐으며, 석방 이후 인천·경기 지역에서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 장울병 국회의원 비서관, 민주노동당 정책위 부의장, 진보신당 정책위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진보신당 부설 상상연구소 부소장으로도 활동했다.

외국 정책위원과 서울연구원 조빙부 연구위원 등을 거쳐 KAIST에서 남북관계와 평화협력 등을 연구했다. 2024년 3월 조국혁신당에 입당했으며, 같은 해 4월 당 통일특보에 임명됐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대 4년 새 수도권 신입생 12.5% 늘어…취업·정착 대책 시급

내년 등록금 전액 지원에 수험생 관심 높아져

이인선 “지역 취업·정주 연계한 육성책 절실”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지방거점국립대에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최근 4년 새 15% 증가한 가운데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되면 더 늘어날지 주목된다.

아울러 유입된 수도권 출신 학생이 졸업 후 지역 내 취업과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15일 9개 지방거점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출신 신입생은 지난 2023학년도 7360명에서 올해 8469명으로 1109명(15.1%)이 증가했다.

2026학년도 수도권 출신 신입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강원대 3817명(58.8%)이었고, 이어 충북대 870명(26.7%), 전북대 802명(19.3%), 충남대 616명(15.3%), 전남대 592명(12.5%) 순이다.

또 경북대는 532명(9.6%), 경상국립대는 463명(10.0%), 제주대는 436명(18.7%), 부산대는 341명(7.2%)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수도권과 거리와 접근성이 진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대와 충북대의 수도권 출신 신입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경상국립대와 부산대는 수도권 출신 비율이 각각 10.0%, 7.2%에 그쳤다.

실제로 강원대는 신입생 10명 중 약 6명, 충북대는 4명 중 1명 이상이 수도권 출신이었다.

이들 수도권 출신 신입생들이 대학 졸업 후 수도권으로 이동해 취업할 가능성도 엇비슷하다. 그별 경우 지역 인재 확보와 인구 유입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전액 지원이 추진되면 서 지방대학 진학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

지방거점국립대 수도권 출신 신입생 현황

대학	2023학년도	2026학년도	증감
강원대	3618명 (55.0%)	3817명 (58.8%)	+199명
충북대	743명 (24.7%)	870명 (26.7%)	+127명
전북대	632명 (16.2%)	802명 (19.3%)	+170명
제주대	379명 (16.4%)	436명 (18.7%)	+57명
충남대	569명 (14.9%)	616명 (15.3%)	+47명
전남대	431명 (9.5%)	592명 (12.5%)	+161명
경상국립대	353명 (7.7%)	463명 (10.0%)	+110명
경북대	435명 (8.7%)	532명 (9.6%)	+97명
부산대	200명 (4.6%)	341명 (7.2%)	+141명
합계	7360명	8469명	+1109명

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 2130억 원을 반영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충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토부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반도체산단 조성에 맞춰 기업 수요가 적급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부지·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기업의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

갈 예정이다.

민형배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흥 장관에게 무안 국가산단 조기 지정, 산정지구 등 주변 정주여건 조기 개발 등을 건의했다. 더불어 탄약고 예정부지 조기 착공과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후보지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민 시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 장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홍지선 국토부장관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주신 만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 시내버스 9년 만에 노선 개편

31일 시행…사전 안내·시설물 정비 착수

노선 115개로 확대 운행…하루 535회 증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오는 31일 시행되는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앞두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찾아가는 노선개편 알리미’ 운영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류소 및 버스 시설물 정비에 돌입한다.

이번 노선 개편은 9년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은 103개에서 115개로 12개 노선이 늘어나고, 하루 운행횟수는 8394회에서 8929회로 535회 증가한다. 특히 교통카드 빅데이터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간선노선 직선화, 교통수요 변화 대응, 혼잡·중복·장거리 노선 조정 등에 중점을 뒀다.

통합특별시는 누리집, 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변경노선을 다각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16일부터 정류소와 버스 내부에 부착된 정보부니(QR코드)를 통해 노선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에는 안내문·노선도를 비치하고, 홍보영상도 송출한다.

이와 함께 광주자원봉사센터,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협력해 ‘노선개편 알리미’ 140명을 운영한다. 이들은 오는 19일부터 11일간 96개동 경로당과 교통취약지역을 찾아가 변경노선을 안내하며, 개

편 시행일 전후 5일간 역·터미널 등 주요 거점 20곳에서 현장안내를 지원한다.

시설물 정비는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버스 행선판을 시행 2주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노선번호판은 개편 시행일인 오는 31일 맞춰 교체한다. 이에 따라 일부 버스는 기존 노선으로 운행하면서 개편 후 행선지가 표시될 수 있어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노선 개편에 따른 차량 재배치로 일부 버스는 노선 유형과 차량 색상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통합특별시는 직행과 석형과 금행버스를 우선 도색하고, 나머지 차량은 대체차(차량이 만료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통합특별시는 시민들에게 행선판 사전 교체와 일부 차량의 색상 불일치에 유의하고, 탑승 전 노선번호와 행선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선 통합교통국장은 “시민들이 변경노선을 미리 확인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시설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행 이후에도 운행 상황과 시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